“6월 국회 與 페이스에 말릴 수 없다”

■ 민주 비정규직법 초강경 모드 고수 배경

“대량실업 주장은 미디어법 지렛대”
‘서거정국’ 주도권 이어가기 의지도

한나라당이 단독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초강경 모드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사회적 파장이 막대한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등과 관련, 대규모 실업 사태 등을 내세운 한나라당의 압박에도 강경기조를 유지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 홀을 시한부로 점거하는 등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관철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강경 모드는 비정규직 법안 개정 여부가 결국 3차 입법전쟁 등 하반기 정국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비정규직 법안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실업대란’ 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수십만 명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에 직면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주장이며 일부 해고 사태가 있겠지만 그 수준은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1천180억 원을 활용하면 당분간 대량 해고 사태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실업대란을 내세우는 것은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비정규직 법을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민주당이 비정규직 법안 개정에 협조할 경우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기선을 제압하게 되며, 비정규직 법안 개정에 끝내 반대하면 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발판 삼아 미디어 관련법 강행 처리의 명분을 얻으려는 게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대량 실업’ 주장의 실체라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법안 개정이 무산될 경우, 한나라당이 패키지로 비정규직 법안과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제부터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에 그리 관심이 있었느냐”며 “대량실업 등 한나라당의 주장에는 미디어 관련법 처리 등 정략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평가절하 했다.

한편, 민주당의 이 같은 강경 태세의 배경에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어렵사리 얻은 정국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를 개회했다는 점에서 여론전에서도 밀리지 않는데다 비정규직 법안 개정에 이어 미디어 관련법 통과를 저지한다면 보다 강력한 제1야당으로의 기반을 확고히 하면서 하반기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추모 민심이 사실상 마무리 된 현 시점에서 한나라당에 밀린다면 청와대의 국정쇄신책 쓰나미에 휩쓸리면서 정국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민주당이 강경기조를 유지해온 배경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 등 4대강 살리기 정책 탐방단이 지난달 30일 영산강 살리기 프로젝트 시행지역인 나주시 영산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현장을 방문,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영산강 프로젝트 실무 조정 기구 필요”

한나라 정몽준 최고 ‘영산강 살리기’ 나주 방문

한나라당이 현장정치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한나라당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몽준 최고위원 등은 지난달 30일 영산강 살리기 프로젝트 시행지역인 나주시 영산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임기 내 대운하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4대강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곧바로 당 차원에서 나온 민생탐방이다.

특히 이날 정 최고위원은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별 의견 수렴 및 조정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대강 살리기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완성돼야 한다”며 “주민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4대강 살리기는 정치적 사업이 아니고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면서 “특히 영산강 살리기는 정부의 4대강 발표 이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염원(뱃길복원) 이었고, 이게 정부의 뜻과 맞아 떨어져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고 지역민들의 뜻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조기 전당대회(전대)나 대권 도전 등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조기 전대 개최와 관련,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조기 전대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대치국회나 9월 정기국회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10월 이전 전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전대는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당이 결정할 문제다”고 한발을 뺐다.

정 최고위원은 하지만 당권 도전 의지는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난 총선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친정’은 (친정몽준) 바로 나 아니냐”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 친이명박 계열과 연대 모색을 통한 당권 도전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한나라당 정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성조 정책위의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신상진·권택기·이화수 의원 등이 동행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인적쇄신·개헌론 수순 밟을 듯

■ 국정개혁 시동 건 李대통령 다음 선택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운하 포기’와 ‘민생사범 사면’을 밝힘에 따라 국정쇄신을 위한 ‘근원적 처방’의 로드맵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원적 처방의 내용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정치권의 지각변동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근원적 처방전은 3단계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우선 1단계로 ‘대운하 포기’와 ‘민생사범 사면’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1단계 처방은 서민과 중산층의 끌어안는 ‘민생 우선’의 메시지를 통해 중도 실용주의를 강화, 집권 2기의 토대를 다지겠다는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2단계 처방은 인적쇄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인적 쇄신은 국정개혁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내각과 청와대의 개편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고 누차 말해왔지만 과감한 국정 개혁 의지를 천명한 만큼 이에 따르는 인적 쇄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3단계로는 개헌론과 행정구역 개편, 분권형 국정운영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안이 제시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모든 사안마다 정국에 미치는 폭발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재산 전액 환원도 마지막 국정쇄신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의 모습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국정 개혁의 방향을 설명하도록 대국민 담화 내지는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가 라운지

10인 대책위 도청별관 해법 논의

○…민주당 조영택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1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국회 의원회관에서 옛 전남도청 별관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청취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의원들은 오전에 열리는 1차 모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정부 측 입장에 대한 진술을 듣기로 했으며 오후에 열리는 2차 모임에서는 시민사회에서 합의안으로 제시된 ‘오월의 문’과 ‘3분의 1 보존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별관문제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모임에는 10인 대책위원회 간사인 조영택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최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광주시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박지경기자 jkpark@

담양군수 출마 유력 유창종씨 퇴임

○…내년 지방선거에서 담양군수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유창종(56·사진)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장이 지난달 30일 명예퇴임했다.

유 센터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그동안 30여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인 담양군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겠다”며 내년 담양군수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

담양부군수를 지낸 유 센터장은 광주일고·전남대를 졸업했고, 행시 24회로 1980년 공직에 입문해 순천부시장, 전남도 농정국장·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두언 “이달내 사교육 절감대책 내겠다”

심야 학원교습 금지를 추진하다가 여권 주류세력의 반발로 실패했던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지난달 30일, 7월 내에 심야 학원교습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 절감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법규가 있는데도 그동안 흐지부지해 왔던 것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학원 권력이 워낙 세서 그런지 이런저런 이유로 잘 안 된다”며 “시도 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수 없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서고 국세청과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해야겠다”고 말했다.

노건호씨 LG전자 그만두고 봉하마을로

지난 5월 23일 서거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씨가 김해 봉하마을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LG전자 미국 샌디에이고 법인 소속인 노씨는 직장생활을 정리한 뒤 아버지의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에 어머니 권양숙 여사와 함께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건호씨는 지난 2002년 7월 공채로 LG전자에 입사해 4년 후 미국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진학을 위해 잠시 회사를 떠났다 2008년 10월에 복직했다. 그러나 지난 4월12일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되면서 일시 귀국했고,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삼우제가 이어지면서 계속 한국에 머물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